

정책토론회

대학정책과 입시제도 개편논의, 어디로 가고 있나

| 일 시 | 2017년 7월 27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국가교육국민감시단

■————— 순 서 —————■

■ 사 회

- 조 동 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주제발표

- 상생대학네트워크로 대학개혁 가능한가?
: 김 상 국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공동대표)
- 교육시민단체가 바라보는 대입시제도
: 김 정 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

■ 토 론

- 김 행 범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 오 세 목 (중동고 교장)
- 박 주 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 질의·응답

■ 폐 회



■————— 목 차 —————■

■ 주제발표

주제1. 상생대학네트워크로 대학개혁 가능한가? 7
- 김상국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공동대표)

주제2. 교육시민단체가 바라보는 대입시제도 31
- 김 정 욱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

■ 토 론

김 행 범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47



상생대학네트워크로 대학개혁 가능한가?

김 상 국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교육공약 중에는 ‘입시 경쟁 부추기는 학교 서열화 해소 4대 공약’이 있다. 이 공약은 ‘대학입학보장제, 상생대학 네트워크,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고교 선지원-후추첨 전면 도입 및 고교체제 단순화’로 구체화 된다. 이 중 대학입시와 직접 관련된 공약은 ‘대학입학 보장제’이며 이것은 대학체제 개편안으로 제시한 ‘상생대학 네트워크’와 연결된다.

‘대학입학 보장제’는 일정한 기준을 통과하면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부의 대학입학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이를 실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상생대학 네트워크’가 제안되었다. ‘상생대학 네트워크’ 제안은 대학평준화를 주요 골자로 한 ‘자사고 vs 혁신학교와 일반고 구도’의 대학 버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상생대학 네트워크’ 제안의 구체적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I. 상생대학 네트워크란?

II. 상생대학 네트워크 제안의 문제점

- 세계관, 교육철학, 현실진단의 측면

III. 실행 결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 ‘자사고 vs 혁신학교와 일반고’ 구도의 대학 버전

IV. 프랑스의 입시와 현실

V. 맺는 글

I. 상생대학 네트워크란?

<인용출처>

통합국립대학-공영형 사립대학에 기초한 대학 공유네트워크 구축(안):

초· 중등교육 정상화-입시교육 해소를 위한 대학체제 개혁을 제안한다

-서울시 교육청-

※ 최대한 원문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나, 필요에 의해 일부 편집과 생략이 있습니다.

또한, 출처에 의하면 본 안에서 상세한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대학네트워크의 구체적인 상(像)자체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고정된 안은 아닙니다.

1. 제안의 주요 취지

- 서열화 된 대학체제 하에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과도한 경쟁이 ‘블랙홀’처럼 초· 중등교육에 악영향. 따라서 초· 중등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학체제 개혁이라고 하는 근원적 계기가 필요함.
- 대학 입시로 인하여 우리 교육에 만연된 점수 경쟁, 국영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문제풀이식 교육 등 고교교육이 파행. 대학입시가 학교 간의 과열 경쟁을 낳고 그것이 사교육 팽창으로 사회 문제. 사교육의 완화를 위해서도 대학체제 개혁이 필요함.
- 대학에서 양성하는 인재와 사회 및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 간의 괴리가 대단히 커져 있음. 현재의 대학학벌은 그 자체가 ‘수월성’의 대가라기보다는 일종의 ‘사회적 기득권’ 과 같음. 그래서 사회와 시장이 요구하는 창의성이 발휘되기 위해서, 사회적 기득권으로서의 대학서열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음
- ‘수직서열화’된 대학구조 내에서의 상층대학 혹은 학벌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불필요한 과열경쟁을 완화시켜야 사교육 시장의 확장과 초· 중등교육의 왜곡을 벗어날 수 있음. 또한, 수직서열화 된 대학체제를 수평적 재구조화하여 사회경제적 부에 의한 학부모의 서열화가 자녀들의 교육서열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함.
- 아울러 통합국립대학을 포함하는 대학 공유네트워크는 지방경제의 몰락 및 서울 집중화를 완화하는 의미를 가짐.

- 현재 한국사회는 대학진학 인구가 수년간에 20만 명이나 감소하는 거대한 구조조정을 겪고 있음. 그런데 이를 단순히 진학학생 수의 감소에 대응하여 대학별 정원의 재조정이라는 미봉적 방식으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부의 대학개혁도 이런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20년 후의 한국사회를 염두에 두면서 미래지향적 개혁이 되도록 하고 구조개혁적 기회가 되어야 함.
- 프랑스 파리에서의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도 1968년 혁명 이후에 촉발되어 실현되었음. 한국에서도 촛불시민혁명이 단지 정치적 반대 때문이 아니라 현재의 불평등한 사회현실과 교육현실에 대한 반대와 저항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할 수 있음. 현존 교육체제에 대한 광범위하고 깊은 불만과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강력한 열망이 존재하고 있음.
-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차별 없이 하면서 균등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정상이라고 본다면, 대학 졸업 여부에 따른 사회적 신분과 직업과 임금의 서열이 존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대학체제의 내적 합리성과 평등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절반의 성공에 불과할 수도 있음. 그러기에 대학서열체제 해소 방안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대학체제의 합리적 발전방안 차원에서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체제를 매개로 시간적으로 양쪽에 놓인 초중등교육과 직업영역의 정상화를 도모하거나 촉진하기 위한 매개적 역할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음.

2. 제안이 추구하는 목표

- **대학 서열화 구도 완화를 통한 입시경쟁 해소:** 중등교육의 정상화는 현실적으로 대학 입시에 종속되어 있는 현재의 교육제도 하에서 자체적 개혁으로 완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 공유네트워크 구축은 대학의 서열화 구도를 완화하여 과도한 입시경쟁으로부터의 탈피와 이를 통한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추진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임. 다시 표현하면, 학벌사회해소-대학서열해소-입시해소의 3대 해소의 동시적 추진이라는 큰 목적 하에 구상된 것임.
-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 대학 공유네트워크 구축은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진행된 대학의 민영화, 영리화, 시장화의 파괴적 결과를 완화하고, 대학이 ‘사적 재화’가 아니라 보편적 교육을 위한 ‘공적 재화’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임.
-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와 그를 통한 재정합리화의 모델 실현:** 대학 공유네트워크 구축

은 통합국립대학들 간, 지역 중심 국립대학, 공영형 사립대학들 간의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대학모델을 만드는 것을 지향. 1차적으로 통합국립대학 간에, 2차적으로 권역별 통합국립대학-지역중심 국립대학-공영형 사립대학 간에, 3차적으로 통합국립대학, 공영형 사립대학, 나아가 독립형 사립대학 간에 네트워크형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가 실현되는데, 그 공유수준이 다를 뿐이며, 궁극적으로 통합네트워크 내에서 이러한 공유의 수준을 높여가야 함.

3. 대학체제 개혁의 기본방향

수직적 서열화를 넘어 수평적 다양화로

- 대학체제 개혁의 기본 방향성은 현재의 ‘수직서열화’ 된 대학체제를 ‘수평적 다양성’의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함. 한국사회의 다양한 구성단위들--개인, 집단, 조직, 지역, 계급계층 등-이 하나의 기준에 따라 수직적으로 서열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준들이 인정되고 자유로운 계층이동이 이루어져서 현재 일부 집단만이 누리는 독점적 지위를 갖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을 지향함.

일정한 수준에서의 미래지향적인 대학평준화의 시도

- 대학 공유네트워크는 전면적인 대학평준화까지는 아니지만, 일정한 수준에서 대학평준화의 의미를 갖고 있음. 궁극적으로는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공영형 사립대학과, 가능하다면 독립형 사립대까지도 아우르는 평등한 고등교육체제를 지향하며,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수평적 공공적 고등교육체제를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음. 학문에 뜻을 두고 있는 학생의 경우 원할 경우 누구나 평등한 대학에 순수한 학문적 열정을 갖고 진학하여 국가의 지원 속에서 공공적인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기에 진로를 결정하여 직업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아무런 차별이나 불평등없이 공공적 직접 교육을 받아 사회에 진출할 수 있음. 물론 이러한 대학진학 또는 진로직업 매커니즘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학간, 전공간, 그리고 직업간 서열과 차등이 없어야 함을 전제로 하기에 일정한 직업적 평준화가 필요한 것임. 지금처럼 학력과 학벌이 직업적 위상을 결정하고, 역으로 산업적 서열이 학력을 줄 세우기 하는 상황, 즉, 산업과 대학이 동시에 시장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구조에서는 학력, 학벌을 중심으로 한 서열화, 대학서열,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초중등교육의 입시교육으로서의 비정상화 탈출은 요원할 수밖에 없음.

대학 공유네트워크 구축

- 현재와 같은 대학의 단일 서열체제를 개혁하여,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각 지역별 국공립과 사립대학이 특성화된 경쟁력을 갖기 위한 대학 네트워크 구축. 기초학문의 측면에

서는 국립대학이 강점을 갖고, 실용학문의 측면에서는 사립대학이 강점을 가지며, 지역별로도 특성화된 강점을 갖도록 국가의 지원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차별화 함. 모든 학과·학문·전공에서 서열화를 제약함. 국공립대학 내부에서도 소속 국립대학들 간에 집중육성분야(주력분야)를 갖도록 하여, 국가의 지원정책도 이를 반영 함.

- 현재 개별화되어 있는 거점국립대학을 통합하는 재구조화과정에서 국립대학이 대학서열화를 완화하는 공공적인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함.
- 현재의 다양한 사립대학 중에서 독자생존이 어려운 사립대학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립대학들이 공영형 사립대학(혹은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하도록 함. 이 공영형 사립대학은 사립대학으로서의 역사성과 전통을 존중하되 개방이사의 수를 확대하는 등의 공공적 운영을 하는 것을 의미 함. 공영형 사립대학이 정착하는 경우 사립대학은 공영형과 독립형 사립대학으로 유형적 분화를 이룰 것임.
- 궁극적으로 통합국립대학과 공영형 사립대학을 아우르는 대학네트워크 구조 하에서 공통 교양과정, 학사관리, 학교운영 등의 체제를 갖추게 됨.

4. 대학 공유네트워크의 기본구조와 단계별 발전방향

[대학 공유네트워크의 3가지 차원]

단계	범주	대상	공유 모델의 3차원	사례
1 단계	전국	거점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10개 거점 국립대학들 간의 제도적 통합, 통합된 틀 내에서의 자율성(통합은 '단일'과는 다르다. 즉 10개 국립대학이 하나의 단일국립대학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앞의 제1유형으로 되는 경우에도, '서울대 폐지'는 아니다).
2 단계	권역별	거점국립대 +지역중심국립대 +공영형사립대	연합 네트워크	권역별로 통합국립대학, 지역중심 국립대학들, 공영형 사립대학들 간의 인적·물적 공유와 협력
3 단계	권역별	거점국립대 +지역중심국립대 +공영형 사립대 +독립형 사립대	일반 네트워크	권역별로 통합국립대학, 지역중심 국립대학들, 공영형 사립대학들을 물론, 독립형 사립대학들까지 포괄하는 네트워크형 협력

서울시교육청은 △1단계: 통합국립대학 구축 △2단계: 통합국립대학-지역국립대학-공영형 사립대학간의 권역별 대학 연합네트워크 구축 △3단계: 통합형-연합형 대학 공유네트워크 구축 등의 단계적 개혁 방안을 제안하였다. 단계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 통합국립대학의 구축

- 서울대(법인화 폐지)를 포함하여 10개의 거점 국립대학(충북대, 충남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을 포괄하는 통합국립대학을 구성하는 제1유형과, 서울대(법인 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광역 시도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통합국립대학을 구성하는 제2유형의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음.
- 통합국립대학은 통합성을 갖기 때문에, 소속 대학들 간에 특성화된 학문 영역을 갖도록 할 수 있고, 국가의 지원도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음.
- 특성화 영역을 중심으로 거점국립대학에는 대대적으로 국가적 수준에서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통합국립대학의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다.
 - 통합국립대학은 공통의 학위를 받음.
 - 교수와 학생의 자유이동, 학점 상호인정, 정교수 승진 전에 순환근무를 의무화.
 - 통합국립대학의 선발 방식은 '단일한 대학명에 의한 지역별 선발'임.
 - 통합국립대학 내에서 1년 동안의 공통교양과정을 운영함.
 - 입학 후 통합국립대학 내 소속대학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통해 허용.
 - 통합국립대학 내의 동일학과 및 전공 간의 통합적 운영과 협력체제를 구축함.
 - 소속대학별 별도의 의사결정체제와 동시에 통합국립대학 차원의 의사결정체제

2단계: 통합국립대-지역국립대-공영형 사립대학간의 권역별 대학 연합네트워크 구축

- 1단계의 개혁 작업에서 동시에 공영형 사립대학을 확대해 나감. 2단계에서는 그 기초 위에서 통합국립대학과 공영형 사립대학 간의 '대학 연합네트워크'를 구축함.
- '공영형 사립대학'이란 "사립대학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립고등교육기관"을 말하는데, 사립대학으로서의 역사성과 전통을 존중하되, 재정 지원을 받는 것에 상응하여, 대학 운영에서 국공립대에 준하는 공공성과 책무성을 갖는 대학을 의미함. 공영형 사립대학이 정착하는 경우 사립대학은 공영형과 독립형 사립대학으로 유형이 분화될 것임.
- 통합국립대학에 속한 대학이 각 지역별로 거점대학이 되도록 하여 일종의 '공유의 플랫폼'이 되도록 함. 이를 통해 통합국립대학-공영형 사립대학 간의 권역별 협력체제

가 작동하도록 함. 이는 ‘통합’과 구별되는 ‘연합’ 네트워크로 규정할 수 있음.

- 2단계에서는 국립대학의 기초학문 경쟁력을 지원하고 사립대학에 실용학문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국가지원정책을 분화시켜 감. 2단계의 대학통합네트워크에는 통합 국립대학과 공영형 사립대학 외에도 다양한 지역 거점 국공립대학도 참여하도록 함.

3단계: 대학 공유네트워크

- 2단계 대학네트워크를 독립(형) 사립대학을 포함하는 권역별 대학 연합네트워크로 확장·재구성함.
- 통합국립대학-공영형 사립대학-독립(형)사립대학 간 권역별 협력체제가 작동하도록 함.
- 네트워크화 된 대학들 간에 공통교양과정 운영뿐만 아니라, 학점·학생·교수 등 교육 및 학교 운영에 있어서 통합적이고 상호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

<출처>

서울시 교육청 3월 15일(수) 보도자료:

통합국립대, 공영형사립대로 이뤄지는 대학 공유네트워크 제안

5. 단계별 주요 고려 사항

[국립대학의 유형들]

유형	사례
거점국립대학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경상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인천대
지역 중심 국립대학	강릉원주대, 경남과학기술대, 공주대, 군산대, 금오공과대, 목포대, 부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순천대, 안동대, 한경대, 한밭대
특수목적 국립대학	한국교통대, 한국체육대,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금오공과대, 방송통신대학, 한국체육대, 한국교원대, 방송통신대, 한국예술종합대, 한국전통문화대
교육대학(10개)	경인교대, 공주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1단계

- 제 1유형의 경우 서울대가 법인화된 상태에 있다는 점이 난점으로 제기됨. 그러나 서울대가 완전한 민간 법인이 아니라 국가설립 법인이라고 하는 점에서 여전히 국립대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동의만 존재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임. 1유형으로 간다면, 서울대 법인화는 취소되어야 할 것임.
- 제 2 유형은 서울대를 포함하지 않고 나머지 광역시도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통합국립대학을 만드는 것. 이 경우 수도권, 특히 경기도에 국립대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도권 거점 국립대학을 신설하거나, 원하는 경우 한 사립대학을 국립화하는 방식으로 수도권 국립대학을 만들 수가 있을 것임.
- 통합국립대학 내에서 거점 국립대학들 간의 특성화 분야 혹은 주력분야를 분화시켜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 국립대학의 통합성의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주력분야의 분화를 촉진해야 하며, 국가재정지원의 방향도 이를 지향해야 함. 물론 권역별로 교육의 완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점 국립대학에는 고등교육의 거의 대부분의 학과들이 배치될 수밖에 없음.
- 굳이 대학별 교양과정을 두지 않고 공통교양과정을 두자고 하는 것은, 대학이 갖고 있는 사회공공적 역할을 염두에 둘 때, 마치 준 의무교육과 같이 대학 단계에서도 학문의 세계에 본격적으로 발을 담그기 전에 국가 차원에서의 바람직한 학문의 자세와 방향을 인도하기 위한 일종의 <전환기 학제>로 이해할 수 있음.

2단계

- 2단계에서 통합국립대학은 지역 중심 국립대학까지를 포함하는 대규모 국립대학 네트워크로 확장하게 됨. 물론 이 단계에서의 권역 내 국립대간, 그리고 공영형사립대간 서열 해소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 크게 볼 때, 권역별 하나의 대학으로 작동하는 것을 지향할 때, 그 안의 대학별 격차와 서열이 존재할 경우 이는 다시 대입 입시 과정의 경쟁과정, 대학진학 후 전입경쟁과정으로 왜곡,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1단계에서 거점국립대학들 간의 통합대학이 만들어진 이후에, 통합국립대학을 구성하는 거점 국립대학들이 중심이 되어 다시 지역의 국립대학들과 ‘권역별 국립대학 연합네

트위크'를 구성하는 과정이 2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함. 이럴 경우 지역 중심 국립대학은 거점 국립대학을 매개로 하면서, 통합국립대학 네트워크의 2차 구성 부분이 될 수 있음. 2단계에서 통합국립대학은 지역 국립대학(강릉원주대, 경남과학기술대, 공주대, 군산대, 금오공과대, 목포대, 부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순천대, 안동대, 한경대, 한밭대)을 포함하는 확장된 네트워크가 됨.

※ 대학통합, 연합이라는 것이 저절로 이뤄지지 않고, 상당한 현실 역학적 조건에서 다양한 정책적 유인 도구와 국민적 동력을 뒷받침으로 하여 노력할 때 가능할 것임.

3단계

- 물론 일반 독립적인 사립대를 국가 공공 대학 네트워크에 편입시킨다는 것은 이상적인 것일 수 있음. 사립대가 스스로 공공성을 지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견인 장치와 다양한 작업이 필요할 수밖에 없음. 그럼에도 일부 유력 사립대들의 경우 마치 일부 자사고, 외고 등 고교체제로부터 이탈하여 독립적인 입시경쟁력을 갖고 있는 고교 유형의 경우처럼, 굳이 국가 고등교육체제에 편입되는 불편함과 불이익을 감수할 가능성은 없을 수 있음. 현재의 시장 본위의 고등교육 영역이 보다 큰 틀에서 사회화, 공공화되지 않는 이상(사학법 전면 개정 등), 거대한 패권 사립들(말하자면 경제영역에서의 재벌과 같은 위상을 가진)에 대한 공공적 통제와 운영은 쉽지 않은 일. 이를 하루 아침에 변혁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적 조건에서, 우선은 국공립대체제의 강화와 유력 사립대에 대응하는 경쟁력 확보, 그리고 영세 또는 위기의 사립대들이 능동적으로 생존 활로를 찾기 위한 과정에서 공공체제로 편입되는 과정을 통해서 고등교육 영역을 공적 힘이 보다 우세하게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편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것임.

6. 통합국립대학, 공영형 사립대학 운영 관련 주요사항

통합국립대학

- 통합국립대학의 선발은 대학입시의 변화와도 연계되어야 함. 예컨대 내신 성적 10% 이내의 학생들로 입학자격을 제한하며, 국영수 등을 자격시험화 하고 1,2,3지망까지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통합국립대학은 '자격고사화 된 수능'과 고교 내신을 중심으로 선발하게 될 것임. 사실

현재 ‘논술시험’ 등 긍정적인 시험방식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인하여 사교육경쟁으로 왜곡되어 버리게 됨.

- 선발은 계열별로 선발할 수 있을 것임. 각 계열별로 고교 내신성적으로 선발된 학생(70%)과 대학입학자격시험 합격자들(30%)로 함. 어느 국립대학(캠퍼스)에 입학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계열별 자격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의 1,2,3지망에 따라 ‘추첨’의 방식으로 배정한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함. 물론 여전히 대학서열해소가 우선될 것인지, 입시를 통한 학생균형 배정이 우선일지는 복잡한 문제로 남게 됨. 가령, 대학서열, 전공서열, 지역서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네트워크 또는 통합이라면 네트워크 또는 통합대학 안에서도 지역별 선호(당연히 서울과 수도권), 또한 특성화된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높은 인정을 받는 전공으로의 쏠림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균형배정이라는 원칙과 충돌하게 될 우려도 있음. 이를 해소하는 정교한 설계안이 필요함. 이상적으로는 서열해소 된, 즉 상향평준화된 대학체제에서 학문을 원하는 학생은 누구나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추첨 등을 통해서 원하는 학교에, 전공에 배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함.
- 국가적 차원에서 기초학문은 국립대학에서, 응용학문은 사립대학에서 맡는 거시적 분업 구조를 지향.
- 전공 진학은 전공별 필수 이수과목과 교양과정 선택 이수과목의 성적을 중심으로 하며, 영어와 수학 등 도구과목의 자격시험 통과 여부도 고려할 수 있음. 원하는 전공에 진학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2전공의 이수를 가능하게 함.
- 통합국립대학은 중층적인 지배구조를 갖는다. 즉 소속대학별로 의사결정체계를 갖는 반면에, 전체 통합국립대학들을 포괄하는 의사결정체계를 갖는다. 이를 위하여 통합네트워크 수준의 가치 ‘통합이사회’와 대학별 ‘평의회’를 둬.
- 통합국립대학 내의 교수들은 상호이동을 자유롭게 하되, 정년보장을 받기 전에(이른바 tenure을 받기 전에) 한번은(혹은 일정한 회수만큼) 소속대학을 바꾸어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것을 의무화함.
- 국공립대 통합대학 내에서는 동일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장함.
- 통합국립대학 내에서의 ‘제한된 서열화’가 중단기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임.

그렇지만 기존의 ‘국공립대 공동학위제’를 뛰어넘는 큰 틀에서의 국립대학 통합과정이며, 기존의 서열화는 크게 완화될 것임. 심지어 1968년 혁명 이후 70년대 이후 파리 국립대학의 경우에도 내부에서 서열이 존재함. 그러나 한국에서 통합국립대학이 어느 정도의 평준화적 성격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은 형성과정, 그 과정에서의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으로 판단됨.

공영형 사립대학

- 공영형 사립대학은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학운영경비의 50% 이상을 제공받는 반면, 인사 및 예산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이 아니라 대학구성원 및 정부에서 임명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대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권을 가짐. 공영형 사립대학도 이른바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지역에 기반한 직업대학의 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나, 기본적으로 지역공동체 대학(community college)의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런 점에서 이사회에 지역인사들이 다수 참여해야 할 것임.
- 학교법인은 공익이사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식으로 개편함. 이사회에는 지역인사들이 참여하게 됨. 공영형 사립대학은 사립대학의 창립자와 창립정신이 계승되도록 하는 명예가 있도록 하되, 운영 자체는 공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임.
- 공영형 사립대학은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며, 이의 예시는 서울교육청에서 임재홍 교수 등에 의해서 수행된 연구프로젝트에 의해 제시된 법안을 별첨과 같이 예시로 제시함.
- 대학구조조정을 해서 대학입학정원을 축소하는 마당에 한계사학을 살리면 여전히 과잉이 되지 않는가하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대학은 ‘교수 1인당 학생수’가 OECE기준으로 현저히 낮기 때문에, 공영형 사립대학의 통합운영을 하는 경우 입학정원은 일정하게 축소하더라도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낮아진 상태에서 운영할 수 있을 것임. 이것은 고등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와도 맞아떨어지는 것임.
- 공영형 사립대학은 권역별로 학생들을 공동선발 한다. 예를 들어 광역 시도 단위로 학생들을 공동선발 한다.
- 권역별로 전공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교수 인사는 정년 보장을 받기 전에 한번은 통

합 공영형 사립대학 내의 타 소속대학에서 근무하도록 한다.

- 공영형 사립대학은 대학진학인구의 감소에 대응하여 ‘주변’ 사립대학들의 정원축소를 하려는 교육부의 정책과는 달리, 사립대학의 구조개편, 사립대학의 공공적 전환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임. 현재 ‘한계 사학’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사학들이 공영형으로 개편하고 권역별 통합운동을 하는 것을 지향함.
- 앞으로 한국사회가 복지사회로 이행하게 되면서 고등교육의 무상의 영역이 확장될 수밖에 없음. 그러한 무상교육 영역의 확장이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 확대와 함께 가야 함. 본안은, 향후 국고지원처럼 공공적 자원이 민간부문에 투자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책무성, 네트워크형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되는 것을 지향.
- 대학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대학운동을 포기하고자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과 국립대학으로의 전환을 폭넓게 허용하는 정책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출구정책’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대학 자산의 10%(비율은 별도의 논의 가능할 것임)를 장학재단이나 사회복지재단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것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예컨대 공영형 사립대학의 확대를 위하여,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유권을 포기하고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 자산의 10%를 장학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줄 있다고 생각됨. 특별법을 통해서 사학소유자들이 대학 운영 포기를 가능하게 하는 경로를 열어주고, 대학 자체는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운영하도록 함.

※ 공영형 사립대학을 실현하기 위한 특별법 예시 주요 사항

「사립고등교육기관의 구조개선에 관한 특별법」(가칭) 주요 내용

제2장 구조개선계획의 제출과 집행

제3조(구조개선계획의 제출) ① 구조개선이 필요한 사립고등교육기관은 언제든지 구조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조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 중 한 가지 이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사립고등교육기관의 설립·경영자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고 사립고등교육기관 경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립대학법인의 권리·의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

2.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에 관한 계획
3. 국·공립고등교육기관과의 통합 계획

제3장 공영형 사립대학

제7조(대학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을 신청한 사립대학 법인에는 다음 각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15인 이상으로 구성된 대학운영위원회를 둔다.

1. 교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교수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교수회 등이 추천하는 자, 교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교수회 등이 없는 경우에는 교원의 과반수가 추천하는 자
2. 학생의 과반수로 조직된 학생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학생회 등이 추천하는 자, 학생의 과반수로 조직된 학생회 등이 없는 경우에는 학생의 과반수가 추천하는 자
3. 직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직원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원회 등이 추천하는 자, 직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직원회 등이 없는 경우에는 직원의 과반수가 추천하는 자
4. 대학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5.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제9조(해산명령 및 잔여재산의 귀속) ① 교육부장관은 사립고등교육기관의 법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사립고등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립대학법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은 사립대학법인의 잔여재산의 귀속은 「사립학교법」 제 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정관으로 지정하는 자는 국가 또는 다른 학교법인에 한한다.
- ③ 국가는 「사립학교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어 교육부장관이 관리하는 재산을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양여·무상대부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기타 교육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④ 사립대학법인은 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II. 상생대학 네트워크 제안의 문제점

- 세계관, 교육철학, 현실진단의 측면 -

우리 사회에는 교육에 대해서 대중의 비합리적인 정서에 영합하는 교육철학이 유행이다. 이것은 경쟁과 평등에 대한 오해에 기초하며 과도한 정부개입, 선택권 제한, 사적 재산권

침해, 사교육 말살 정책, 학력차별금지 등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포퓰리즘의 문제는 현재의 일시적 편의와 잘못된 판단 때문에 미래를 망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고는 얼핏 현재의 문제에 대안을 주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 기성의 것을 부정한다는 획일성을 착각한 것에 불과하다.

‘대학입학 보장제’와 ‘상생대학 네트워크’ 제안(이하, 제안)은 80년대의 계급 투쟁론적 세계관을 우리 교육에 투사한 결과이다. 이것은 ‘자사고 vs 혁신학교와 일반고 구도’의 대학 버전이며, 대학평준화를 의도로 기획된 설계주의자의 정책 구상일 뿐이다. 또한 미래 국가경쟁력을 고려하지 않은 우민화 정책이며 청년 실업을 유발하여 아이들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아이들 소꿉놀이 같은 이런 전체주의적이고 비현실적인 구상을 실험하기 위해 대규모 국고지원과 사회적 비용을 감내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며 ‘도덕적 해이’이다. 또한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시켜야 하는 부모세대의 책무를 방기하여 제2의 ‘이해찬 세대’를 양산하는 구상이다.

경쟁에 대한 오해

소비자로서 생산자들의 경쟁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만 자신이 경쟁의 참가자가 되는 상황은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경쟁은 개인에게는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이며 사회 전체로는 인적 자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메커니즘의 역할을 한다. 어느 사회에서나 한정된 자리를 차지하려는 경쟁은 있기 마련이고, 경쟁에 따른 비용도 지불되어야 한다. 대학입시를 위한 경쟁은 아이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알아가고 이에 걸맞은 위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며 자신의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한 투자이다.

교육생산자인 대학도 생존을 위한 노력과 선택을 받으려는 경쟁과정을 통해 진화하며 연구능력과 교육의 질도 상승한다. 이런 대학들을 정부지원을 미끼로 상생네트에 가입시켜 평준화시키려는 시도는 경쟁의 순기능을 애써 무시하고 질 좋은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을 외면하는 정책이다.

평준화, 공영화되어 발전의 동기를 상실한 채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모습이 대학들의 상생의 길이 되어서는 안된다. 대학 간에 있어 진정한 ‘상생’의 길은 경쟁과정을 통한 질적 진화와 특성화, 분업화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평등에 대한 오해

우리 사회는 아직 '차별과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차별(discrimination)이란 '키, 인종, 성별, 출신지역' 등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특성을 기준으로 기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다. 차이(difference)란 '실력, 소질, 적성, 노력' 등 개인에 의해 변경 가능한 '다름'을 뜻한다. '공정(公正)함'이란 이런 '다름'에 따른 프리미엄을 인정하되 기회 자체는 제한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문제를 사회적 차별의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차별 금지”는 대중적 인기가 있는 구호이다. 그래서 인간사회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차이를 차별이라고 억지 주장하고 결과의 평등에 집착한다. 그러나 이런 경향은 질투에 근거한 남의 성공을 배 아파하는 정서일 뿐이며 결국 효율적인 사회 시스템을 망가뜨려 자신들에게도 손해가 된다.

공정한 사회는 기회의 균등을 추구하는 곳이지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는 곳이 아니다. 노력과 적성에 맞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곳에서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이 싹틀 수 없다. 역사적으로도 차별 철폐와 결과의 평등을 내세운 유토피아는 다른 종류의 차별을 만들었고, 인간의 자유와 삶의 질을 압살하는 지옥으로 변했다.

지금의 문명과 삶의 질은 불평등과 다양성의 결과이다. 세계가 모두 비슷하면 대기의 순환이 없으며 바람도 불지 않으며 생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역별 기후가 모두 비슷하면 농작물 재배의 분업도 발생하지 않는다. 인간의 적성과 재능이 모두 비슷하면 세계적 분업화도 지금의 문명도 불가능하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같은 선택할 수 없는 요인 때문에 입시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학습능력이 돈에 비례한다는 편협한 사고의 소유자들이다. 그러나 공부를 잘하게 되는 요소에는 지적호기심, 목표의식, 의지, 인내심, 집중력 등이 큰 역할을 한다. 이런 요소들을 애써 외면하며 불평등을 외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국보다 후진국에 태어났다면 지금의 혜택을 누리겠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문제의 근원을 사교육으로 호도

교육에 있어 불평등으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 차에 따른 지역 격차와 사교육 접근성의 격차이다. 그러나 공부를 잘하게 되는 요인이 좋은 사교육을

많이 받는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교육특구도 머리 좋은 부모들이 많이 거주하고, 일찍부터 학습에 노출되는 환경적 요인으로 평균 학력이 높은 것이다. 여기에 최근 과도한 평등논리에 따라 수능 시험이 쉬어진 것도 한 몫을 한다. 오히려 이럴수록 학교 운영권의 자유를 보장하고 학교선택권을 소비자에 돌려주어 경쟁이 활성화되게 해야 한다. 경쟁을 통해 각 지역에 입시에 강한 학교가 생겨나고 좋은 사교육이 그 지역에 진출할 요인이 제공되어야 한다.

최근 사교육도 치열한 경쟁의 효과로 가격대비 서비스가 좋아졌으며 절대 가격도 하락했다. 또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저렴하거나 무료인 인프라도 충분하다. 일례로 질 좋은 인터넷강의도 전 과목을 1년 동안 30만원 정도에 수강할 수 있다. 오히려 내신과 쉬운 입시가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지식전달형 사교육’ 보다 학생의 모든 시간과 학습관리까지 통째로 맡기는 ‘관리형 사교육’이 일상화된 것이 사교육비 부담을 가져오는 주된 이유이다.

이것은 사교육이 흔하지 않은 다른 나라에서는 학교나 부모의 역할인 학습 및 생활관리를 사교육이라는 용역을 구입하여 대신 해결하려는 태도이다. 사실 요즘에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격차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는 식으로 사교육 탓을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은폐하기 위한 건강부회이다.

또한, 교육과정을 정상화시켜 고2까지 교과과정을 마치고 고3은 입시를 위한 준비기간이 될 수 있게 해주면 선행학습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게 된다. 결과적으로 재수생도 줄고 선행을 위한 사교육도 줄어들 것이다.

사적 재산권에 대한 침해, 과도한 정부개입

흔히들 대학의 서열화가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같은 종류의 여러 상품이 있을 때 품질에 관한 서열은 있을 수 밖에 없고, 이것은 소비자의 상품 선택을 돕는 중요한 정보이다. 서열은 브랜드 가치의 수직적 위계화이며 브랜드 가치는 오랫동안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시킨 기업의 자산이다.

제안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는 대학들의 노력에 별을 주고 국고 지원을 통해 무임승차하려는 나태함에 상을 주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가 대학들의 무형자산을 시장의 룰을 인위적으로 바꿔 강탈하려는 개입주의 정책이다. 제안의 골격은 최근에 교육시민단체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모 단체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교육정책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상생시민단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국고 지원, 후원, 연구용역 수수

등에서 평등하게 분배하고자 하면 과연 동의할지 의문이다.

제안은 대학서열이 취업에서 차별을 가져오므로 대학서열을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의식의 연장선에 최근 문 대통령이 이야기한 ‘블라인드 채용’이 위치한다. 그러나,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고 해서 출신학교 편중현상이 해소될지 의문이다. “SKY 대학이라 뽑은 것이 아니라 뽑아보니 SKY 출신이더라”라는 회자되는 대기업 입사관계자의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소 극단적이지만 이런 의식구조에서는 ‘대학입학보장제’와 ‘상생대학 네트워크’가 원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경우 ‘취업보장제’와 ‘상생기업 네트워크’ 공약이 나올 수 있다. 내용은 취업희망자를 최소 기준만 충족하면 희망하는 직종에 취업시켜 주는 것이며 불평등해소를 위해 회사 간 동일 직종에 동일 임금제, 기업에 대한 국고지원으로 ‘공영형 기업화’가 주요 골자가 될 것이다.

제안에서 ‘상생리그’에 가입한 사립대는 ‘공영형 사립대’로 불린다. 공영형 사립대는 국고지원을 50% 받는 대신 인사 및 예산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이 아니라 대학구성원 및 정부에서 임명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대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권을 가진다. 또한 학교법인은 공익이사가 50% 이상을 차지하게 되며 이사회에는 지역인사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것은 설립자가 그 운영을 관장하는 사적 존재를 그의 의사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의사결정기구에 포함시켜 공적 존재로 전환하려는 시도이다. 통제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립대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공영화해서 권력의 통제 하에 두려는 발상이다.

위의 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위해서는 법령화가 필요하다. 제안자들은 기존 법의 개정보다는 손쉬운 특별법을 선택했다. 기존법 개정이 반대여론과 절차 등의 이유로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특별법우선원칙’을 악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제안은 ‘공영형 사립대학을 실현하기 위한 특별법 예시’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제3장 공영형 사립대학

제9조(해산명령 및 잔여재산의 귀속)

① 교육부장관은 사립고등교육기관의 법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사립고등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립대학법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은 사립대학법인의 잔여재산의 귀속은 「사립학교법」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정관으로 지정하는 자는 국가 또는 다른 학교법인에 한한다.

이것은 현행 ‘사립학교법’의 학교법인 해산과 관련된 조항들(제34조, 제35조, 제47조, 제47조의2)에 비해 강화된 내용으로 ‘공영형 사립대’ 안의 취지에 비춰보아도 무리한 독소 조항이라 판단된다.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교육부의 학교 통제 권한을 키우려 한다는 의심을 벗어나기 어렵다.

대학의 구체적 실정은 각 대학의 책임 있는 경영진이 가장 잘 안다. 정부개입이 최소화 되면 그들은 생존과 소비자의 선택을 위해 혁신의 노력을 하게 되며, 경쟁의 결과로 자신에게 최적화된 방향을 자연스럽게 찾게 된다.

공영화의 문제점

공영화의 문제점은 책임을 질 주인이 없기에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적 재산권에 대한 보장이 허술해지고, 정부지원이 늘어나고, 운영이 공영화되면 혁신에 대한 에너지는 사라진다. 결국 공유지의 모든 이들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런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개인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사례를 들어 보자. 상아 때문에 무분별한 밀렵과 포획이 증가하자 케냐 정부는 코끼리 사냥을 금지하고 발각되면 중형에 처했지만, 코끼리 개체수는 계속 감소했다. 반면 짐바브웨 정부는 부족별로 공유지를 할당하고 코끼리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부족에게 부여했다. 또한 코끼리의 상아 거래를 합법화했다. 그 결과 감소하던 코끼리 수가 크게 늘어나 나중엔 사냥관광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다.

제안에 의하면 공영화 된 대학의 주요 결정은 ‘교수회, 학생회, 교직원회, 교육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인사와 이사회에 추천을 받은 자’ 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그러나 교육부가 각 대학의 구체적 실정을 제대로 알 수 없다. 교수, 학생, 교직원 등 대학의 구성원은 이해관계자이고 자신들의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 이사회도 지역 인사가 반 이상을 차지한다. 대부분 지역 명망가인 이들이 대학 간 경쟁

이 필요 없어진 상황에서 용기 있는 제안을 관철시키려 노력할 지 의문이다. 대학 운영 위원회가 ‘교육부의 통제 통로, 지역 명망가의 사회적 스펙 제공, 좌파 성향의 활동가를 위한 용돈벌이’로 전략할 가능성이 큰 이유이다.

정부 개입과 운영의 공영화는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와 도덕적 해이로 이어져 혁신 에너지를 없앨 뿐이다. 대학의 공영화와 평준화는 결국 대학의 슬럼화로 귀결되어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게 된다.

-레이건 대통령 1기 취임사 중 발췌문-

현재의 위기에서 정부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사실 정부가 문제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이런 믿음에 유혹받곤 합니다.

“사회가 너무 복잡해져서 자율적으로 관리될 수 없다. 소수 엘리트가 관리하는 정부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 보다 우월하다.”

그런데, 우리 중 누구도 자기 자신을 통치할 능력이 없다면 우리 중 누가 다른 사람을 통치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국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국가가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동의를 넘어서 정부의 팽창을 점검하고 되돌릴 때가 되었습니다. 정부를 없애자는 뜻이 아닙니다. 정부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 잘 작동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의 등에 올라타지 않고 우리 옆에 서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기회를 질식 시켜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불필요하고 과도한 팽창이 초래한 간섭과 침범, 이것이 현재의 문제들과 공존하며 상응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Ⅲ. 실행 결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 ‘자사고 vs 혁신학교와 일반고’ 구도의 대학 버전 -

선발이 없이 모든 지원자를 입학 허가하는 네트워크 가입대학들은 발전에 대한 동기를 상실해 필연적으로 슬럼화 될 것이다. 독립형 사립대(이하, 독립리그)와 네트워크 가입대학(이하, 상생리그)로 이원화 되면서 프랑스의 예에서 보듯 각각 메이저 리그와 마이너 리그로 인식이 정착될 것이다. 시행초반엔 제일 서열이 높은 학교에 추첨되지 못할 가능성 때문에, 정착되는 시기에는 상생리그의 대학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보편화 될 것이다. 따라서 독립리그 진학이 불가능할 경우의 차선택 정도로 인식될 것이다.

고3 후반기에 독립리그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사교육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고2 때까지는 자녀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고 대부분의 부모는 의무감 때문에 미리 포기하기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지금도 사교육 기관에서 학생의 가능성을 과대 포장해서 사교육 구입을 유도하고 있다. 결국 독립리그를 대비하는 경쟁과 사교육은 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폐단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상생리그의 간판 역할로 사립 명문대학의 가입이 필요한데 일단 SKY 대학은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 아래 서열의 사립대학 중 현재 우수학생 모집에 별 어려움이 없는 경우, 브랜드 구축에 투자한 돈과 노력이 의미 없어지며 마이너리그로 취급받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자신이 공영화되었을 때, 운영권에 심대한 간섭을 받을 가능성을 걱정해야 한다. 심지어 상생대학 네트워크 안은 기초학문은 국립대 중심이고, 사립대는 응용학문 위주로 재편할 계획을 담고 있어 기초학문 역량을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명문 사립대는 국고지원을 포기하고 자력으로 독립리그에 남는 것을 택할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서열에서 무력감을 느껴 경쟁보다 국고 지원에 의존하려는 무임승차 태도를 보이는 사립대들이 생겨날 것이다. 한 사립대의 참여는 그 이하 랭킹 대학들을 대부분 상생리그에 참가시키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결국 서울 소재 명문 사립대가 어느 정도 참여하느냐는 여부가 상생리그의 규모와 성패를 결정하는 관건이다.

명문 사립대를 상생리그로 가입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1단계에서 상대적으로 통제가 쉬운 국립대 통합을 시도하는 것이다. 국립대 슬럼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학자격 요건을 상위 10%로 제한(2단계 부터는 다른 공영형 사립대와 평준화)하고 학문적 역량 강화를 위해 대규모 국고 지원을 한다는 구상이다. 국고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학별로 특성화된 학문 영역을 갖게 하고 국가 지원도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학생의 학업능력은 대학의 학문역량과 직결된다. 만일 우수 학생들이 통합국립대에 대해 불확실한 전망을 가질 경우 지원을 꺼릴 것이고 이 경우 대규모 국고 지원은 그 의미를 상실한다.

또한 이 경우 각 국립대별로 특성화 대상이 아닌 학과와 그 연관 학과가 슬럼화 된다. A대학의 B학과가 특성화 대상인 경우 지금은 성적에 의한 지원이므로 수긍하지만, 추첨으로 배정하는 방식이라 B학과 희망자는 누구나 A대학 배정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승복하기 어렵다. 결국 리그활성화를 위해 정원을 늘려 희망자 모두를 A대학에 배정하게 되고 타 대학의 B학과는 슬럼화 된다.

1년의 공통 교양과정 후 전공 선택하게 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이 경우 학과 선호도가 다

르므로 선발과정이 필요하다. 제안에서는 전공 진학은 전공별 필수 이수과목과 교양과정 선택 이수과목의 성적을 중심으로 하며, 영어와 수학 등 도구과목의 자격시험 통과 여부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이를 위한 대학교과 사교육이 발생하여, 줄었던 고3 사교육이 단지 시기가 늦춰 발생하는 효과이다.

대학입학보장제가 실시되면 입학허용기준에 미달할 경우 대학진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허용기준을 하향시키라는 압력을 받게 되고, 그 기준은 실질적으로 수학적 불가능한 수준으로까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대학은 하향 평준화되고 수학능력이 부족한 학생들도 희망에 따라 배정되므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진학하게 된다. 이 결과 현재와 같은 과도한 진학률이 유지되고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할 부실 대학을 연명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특정 인기학과에 지원이 몰리게 되고 2학년 전공 선택 때 선발을 한다고 해도 탈락자들은 유사학과에 주로 몰리게 된다. 이것은 이후 특정 직업군에 구직인력이 집중되어 청년실업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아이들에게 무책임하게 희망고문을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관해 현재 ‘반값 등록금’이 고학력 청년실업의 주요 근원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IV. 프랑스의 입시와 현실

프랑스의 입시제도

프랑스의 고등학교는 일반계, 기술계, 직업계의 세 계열로 구분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고등학교가 일반계와 기술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음에 따라 실제 학생들의 고등학교 계열 선택은 일반계·기술계 고등학교 또는 직업계 고등학교로 양분된다. 고등학교는 모두 3년 과정이며, 졸업 시 고등학교 졸업자격 시험에 해당하는 바칼로레아(baccalauréat) 시험을 거쳐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할 수 있다. 학생이 진학하는 고등학교 계열에 따라 응시하는 바칼로레아 계열(일반, 기술, 직업 바칼로레아로 구분)도 상이하다. 사실상 프랑스의 고등학교는 계열별 바칼로레아를 준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의 고등교육기관은 학생을 선발하는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체제로 구분된다. 대학과 비대학 부문이다. 대학(université)은 개방 입학정책을 취하는 국립 고등교육기관으로 원칙적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고 지원자는 모두 수용한다. 예외적으로 기술대학

(instituts universitaires de technologie: IUT), 통합 준비과정(classes préparatoires intégrées)은 학생을 선발한다. 비대학 부문은 학생을 선발하는 고등교육 기관으로 대표적으로 그랑제꼴(grandes écoles)과 그랑제꼴 입학 준비하는 2~3년 과정의 준비학교(classe préparatoire aux grandes écoles: CPGE)가 이에 속한다.

프랑스에서 고등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바칼로레아를 취득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입학 기준은 고등교육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입학 요건을 기준으로 고등교육기관을 분류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학생 선발(절차)이 없는 과정이다. 대학들이 이에 속하며 프랑스 대학은 모두 국립이다. 프랑스 전역에 85개의 국립대학이 있으며 파리에는 1대학부터 13대학까지 있다. 소르본으로 널리 알려진 대학은 파리 4대학이다. 프랑스 대학에는 입학 정원이 없으며, 매년 바칼로레아 합격률을 토대로 교육부에서 대학 정원을 결정한다. 바칼로레아 합격자는 누구나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나 프랑스의 대학은 우리나라의 종합대학 체제와 달리 하나 또는 소수의 단과대학 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에 따라 특화된 전공 분야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은 전공에 따라 한정되어 있다.

대학에서의 학년 진급은 매년 엄격한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해당 전공에서 2회 이상 유급을 할 경우 전공을 변경해야 한다. 법학과와 같이 유급하는 학생 비율이 높은 경우(입학정원이 많으나 졸업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학생이 스스로 전과를 하기도 하며, 매 학년도 말 유급 여부를 고민하게 된다.

둘째, 학생의 지원서에 기초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이다. 내신, 교사추천서, 지원동기 등 서류 전형에 기초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는 그랑제꼴 준비학교, 고등기술과정(sections de techniciens supérieurs: STS), 기술대학(IUT), 단기전문대학(instituts universitaires professionnalisés: IUP), 교사양성고등교육기관(Ecoles Supérieures du Professorat et de l'éducation: ESPE) 등이 있다.

셋째, 경쟁시험(concours)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으로 그랑제꼴을 들 수 있다. 그랑제꼴은 프랑스 고등교육제도의 핵심이자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랑제꼴은 학생들에게 높은 지적 기준을 요구하며, 학생과 교수 간 동료관계, 토론식 수업, 외국어 교육 등을 강조한다(Barlow & Nadeau, 2003: 188). 그랑제꼴은 분야별로 매우 다양한데, 법학, 의학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 그랑제꼴이 있거나 그랑제꼴에 준하는 사회적 명망을 가진 학교들이 있다. 취업과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들 학교

의 입학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학생의 능력(성적)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서류 전형이나 경쟁시험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고등교육기관, 예를 들어 그랑제꼴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명망있는 그랑제꼴 준비학교에 입학해야 한다. 그랑제꼴 준비학교에서 그랑제꼴에 진학할 경우에도 성적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다. 분야별로 그랑제꼴의 서열이 있으며, 이는 거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의 실력, 성적으로 어느 수준의 그랑제꼴에 진학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프랑스는 중등교육 대중화와 더불어 바칼로레아 합격률 제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바칼로레아 합격률이 80%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자격시험으로서 바칼로레아의 의의, 학생 선별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고등학교 교사들은 바칼로레아 합격률이 80%에 이르자 바칼로레아 학위를 그저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있다(김정빈, 2012). 또한 기술 바칼로레아나 직업 바칼로레아 취득자 중 취업보다 고등교육 진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기술 바칼로레아 합격자들의 80%가 단기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고 있어 대학입학 자격시험으로서 바칼로레아의 의의가 약해졌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L'express, 2013.7.12.). 1980년대 이후 프랑스 정부가 추진해온 바칼로레아 합격률 제고 정책이 바칼로레아의 성격, 목적에 대한 재검토 논의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 프랑스 고등교육은, 평준화된 대학교육을 내세우면서도 가장 엘리트 중심적이며(이병애, 2004), 다양한 계층이 '분리되어 있으면서 불평등한 사회'(New York Times, 2002.4.27), '그랑제꼴 중심의 엘리트 사회'(New York Times, 2010.7.1)를 유지하는 기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프랑스 초·중등학교 교육은 엄격한 점수제를 통해 그랑제꼴 준비학교를 거쳐 그랑제꼴에 진학하는 사회 각 층의 소수의 엘리트층을 선별하는 거대한 체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은 프랑스 교육제도의 단면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인용 출처>

‘2016 프랑스의 대학입시제도 분석 및 시사점’ : 박 상완 부산 교육대학교, 한국교육개발원

프랑스 대학의 현재

프랑스의 고등교육은 대중적인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일반국립대학교’와 각 분야의 실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집중적으로 함양하게 하여 전문엘리트를 양성하는 ‘그랑제꼴’로 이원화 되어 있다.

점점 더 많아지는 바칼로레아 합격자들을 대학은 수용해야만 하고, 학생의 희망에 따라 대학을 선택하는 제도 때문에 일부 대학에는 적정 수준 이상의 학생이 몰리고 있다. 1969년 이후, 여러 단과대학이 종합대학으로 통합됨에 따라 대학의 인구증대는 학생들의 질적 격차를 초래하였고, 결국 유급생이 늘어나 또 다른 교육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대학은 학생수의 증가와 그에 따른 시설 및 재정부족으로 인해, 갈수록 대학이 안고 있는 교육 환경문제들이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가중되는 느낌을 준다. 명성이 높은 소르본느 대학 역시 겉에서 보기에는 화려하고 위용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건물 내부의 현실은 실망감을 준다. 강의실은 학생들로 뻥뻥하고 복도와 계단에선 다음 강의 시간을 기다리는 학생들로 붐비고 있으며, 각종 편의시설도 부족하다.

또한,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자질이 떨어져, 현재의 학사학위 수준은 바칼로레아 수준밖에 안 될 정도로 저하되었으며,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였을 때 받게 될 급여와 사회적 지위에 대한 염려 때문에 대학 입학 후 1~2년 사이에 탈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런 반면에, 그랑제꼴 출신자들은 산업, 경제, 공직 각 분야에서 많은 책임과 권리가 부여된 중요한 직책이 보장되기 때문에, 취업 시장에서 급여 서열에 있어서 더욱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랑제꼴 졸업생들은 일자리를 얻는데 더 유리하다. 현재 프랑스 사회에서 고급간부, 전문엔지니어, 자유직 종사자는 그랑제꼴 출신들이 우선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인용 출처>

‘이원화된 프랑스의 대학 체계’ 김진환. 열린정신 인문학 연구 제5집

NGO 활동가가 바라보는 대학 입시제도

김 정 옥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대표

1. 들어가는 말

대학의 입시제도가 바뀌면 교육이 달라진다고 한다. 현행 입시제도의 틀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많은 이들이 수능은 암기력 테스트 위주여서 이미 실패한 제도이고, 내신은 죽어있는 공교육의 결과물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논술과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이라 함)도 제도의 장점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사교육으로 무력화된 측면이 강해서 학부모들의 불신을 받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대학 전체를 개혁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수능 절대평가제와 고교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에서 논술은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남아있는 것은 학종과 면접 뿐이다. 결국 대학은 능력 있는 학생을 뽑기 위해서 학종과 면접을 강화하게 될 것인가? 심화된 학습내용을 묻는 심층면접은 결국 본고사 부활을 의미하지 않겠는가?

시민단체 활동가가 바라보는 대학 입시 제도의 문제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때로는 제도가 변경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교육의 정상화는 요원하다는 사실이다. 입시제도의 변화가 교육의 변화를 이끌지 못해 왔다는 방증이다. 이에 대해 두 가지 다른 견해가 있는 듯하다.

먼저, 대학교육이나 입시제도의 개혁은 사회구조의 개혁과 동반되지 못하면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주장이다. 예를 들면 학력 위주의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어떤 처방도 무력화된다는 식이다.

다른 견해를 피력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제까지의 입시제도 개편이 교육의 근본적인 틀을 바꿀만한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입시제도 개혁을 하면 틀림없이 대한민국 교육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교육문제를 현장에서 다루며 느낀 것은 사회구조 보다는 교육이 먼저 바뀌어야 사회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신념이다. 사회구조 개혁과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주장은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교육개혁을 포기한 주장이다.

두 번째 주장도 마땅치 않다. 교육학적인 접근으로는 대한민국 교육을 달라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교육의 틀 즉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혁명적인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본다.

2. 객관식 선다형 시험제도로는 교육을 바꿀 수 없다 (수능의 문제점)

수능을 창시한 박도순 고려대 명예교수는 수능폐지를 주장해서 주목 받고 있다. 당초 학력고사를 수능으로 바꿀 때 암기 위주의 평가방식으로는 사고력을 키울 수 없다는 비판 있었다. 학력고사는 단편적 지식을 묻는 시험이었기 때문이다. 그 해결책으로 나온 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이었다.

박 교수는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언어와 수리 두 영역만 시험보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당연히 반발이 거셌다. 교과 이기주의는 대한민국 발목을 잡는 적폐 중의 하나이다. 결국 언어, 수리탐구1, 수리탐구2, 외국어 이상 4개 영역으로 이루어진 수능이 1993년 시행됐다.

수능 초기에는 탈교과적 또는 통합교과적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다. 그러나 교과 이기주의가 횡행하면서 학력고사와 닮은 형태로 변질되었다. 근래에 EBS연계 출제가 도입되면서 통합교과형 문제는 다 사라지고 EBS 교재를 달달 외우는 암기력 테스트로 전락했다.

객관식 선다형으로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수능이라는 입시제도는 교육을 변화시키기는 커녕 대한민국 교육을 죽이는 킬러가 되어있다. 암기력 테스트에 불과하다는 수능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출제위원들은 이중 삼중으로 꼬이고 비틀어서 문제를 낸다. 다섯개의 보기가 유사할수록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된다. 이런 시험제도를 준비하는 교육을 통해 문제해결력이나 창의적, 사고력을 키운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3. 사교육보다는 공교육이 문제다. (내신의 문제점)

교육 개혁을 논의할 때마다 사교육 문제가 거론된다. 사실은 공교육이 문제다. 공교육이 아무리 정상화하더라도 사교육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교육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더 이상 사교육의 폐해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공교육의 개혁방향을 오도시킬 뿐이다.

4차 산업시대를 맞이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문제해결과 고도의 소통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를 맞이했다. 그러한 인재를 키워내야 하지만 대한민국 공교육은 전혀 이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공교육은 매년 내국세의 20.27%, 2016년 기준 약 57조원의 국가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대한민국 교육의 효율성이 국가를 파탄시킬 정도로 심각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럼에도 교육 관료들은 교육 얘기만 나오면 사교육의 폐해를 거론한다. 공교육에 대한 비난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이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대한민국 공교육은 수용적 학습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학생들을 받아 학문을 가르치는 대학은 어떠한가? 대학 역시 교수의 강의를 받아적기 바쁜 학생들이 A+를 받는다. 수용적 학습으로만 배출된 대졸 고학력자는 차고 친다. 하지만 기업은 쓸만한 인재를 구할 수 없다고 아우성이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지식을 다 알아낼 수 있는 시대이다. 학교는 여전히 기술 과목에서 형광등의 구조를 가르치고 바느질과 요리법을 가정시간에 다룬다.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의 절반 이상은 교사가 필요 없이 책만 읽으면 습득할 수 있는 지식들로 가득하다. 교과서가 없어도 인터넷을 검색하면 얼마든지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을 학교에서 교사를 통해 천편일률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아이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곁에 앉아서 하루 종일 잔소리하며 낚시를 함께 해주는 꼴이다. 공교육이 문제해결력과 창의적인 사고력을 갖도록 하기 보다는 지식 전달에 그치고 있다. 상당수 학생들은 자신이 왜 한문을 배워야 하고 왜 보건을 배워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왜 그런 과목들로 이루어진 내신점수를 잘 받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한다.

4. 국가교육과정과 국가개입주의적 교육행정의 문제점들

획일적인 교육에서 훌륭한 교사의 자격기준은 교육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이 TV를 보는 시간과 학교수업을 듣는 시간의 두뇌의 각성도가 가장 낮다고 한다. 교사들은 정해진 답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르쳐 주는가가 훌륭한 교사의 기준이 된다.

대한민국 국가교육과정은 학교교육과정으로 다시 학년교육과정으로 다시 학급교육과정으로 해마다 전국 1만 여개 학교에서 전개되고 있다. 무엇 하나 교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별로 없다. 결론적으로 교사에게 교육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사들은 국가교육과정과 국가개입주의적인 교육 관료들이 생산해 내는 교육행정으로 인해 잡무에 치여 지낸다. 자율적인 교육권을 행사할 처지가 아니다.

교육과정, 교사, 교과서 등 어느 것 하나 국가의 개입에 의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것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해결력이나 창의적인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수업이 되기 어렵다. 생각하는 능력과 공감능력 등 사회지도층의 필수적인 능력들이 학교에서는 익혀질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도덕과 윤리교과서 역시 암기력 시험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으니 더 말할 나위가 없다.

5. 대학입학시험 유형별 성취도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의 필요성

2016년 기회평등학부모연대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입학유형별 성취도를 통계 분석하여 발표한 바 있다. 유감스럽게도 비교과(학종)로 입학한 학생들의 성취도가 수능/논술/내신에 비해 낮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일반고 비교과에서 두드러졌다. 같은 조사 분석에서 수능/논술/내신의 경우 일반고와 자사고 출신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위 두가지 결론에 의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일반고가 비교과(학종)를 통해 학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데 잘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울시립대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입시유형에 대한 이러한 방식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대학이 얼마나 우수한 학생들을 제대로 선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근래 들어 대학의 비교과(학종) 선발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학종의 경우 정성평가인데다 대학에 전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학종의 선발평가기준을 세세히 공개하라는 학부모들의 주장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학종의 평가기준이 세세히 공표되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을 것이다. 대학이 비교과(학종)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한다면 이러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입학사정관제나 비교과전형을 선도적으로 도입한 것은 서울대학교. 그러나 서울대나 교육부가 입시유형별 성취도를 분석하여 공개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수도권 주요 사립대들이 공동하여 발표한 내용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주요 사립대들은 공동으로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학종 출신 학생들의 성취도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서는 분석 방법에 해당하는 통계분석 모형이나 그에 따른 유의성 등의 세부적인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등이 요구하는 수준의 구체적인 분석 자료를 제시하거나 원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는 2016년 국회 P의원실을 통해 교육부에 서울대 및 주요 사립대의 입시유형별 성취도 분석을 위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지만 자료 제출은 거부되었다. 교육부나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은 입시유형별 학업성취도를 교양/전공/전체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기 바란다.

또한 주요 사립대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기회평등학부모연대가 분석 및 발표한 서울시립대 결과와의 차이점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더욱 심층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는 이러한 후속 연구를 통해 학교간의 학생 선발과정이나 입학 후 학생관리 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학종이 원 취지의 긍정적인 목표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6. 교육혁명의 시작은 시험이다?

-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도입을 검토해야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교육과혁신연구소 이해정 소장은 최근 ‘대한민국의 시험’이란 책을 내서 또 한번 교육계에 경종을 울렸다. 이 소장은 이 책 제2부에서 “시험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역설했다.

시험은 수업을 결정하게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시험은 조용히 배움을 죽이는 역할만 한다. 대입시험이 대한민국 교육 전체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한다. 문제해결능력, 공감능력, 창의적 사고력으로는 도저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고 오로지 수용적인 학습능력 만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초중고의 시험방식은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수업도 시험방식에 좌우된다. 우리 교육이 수용적 학습능력과 일방적인 수업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혜정 소장은 새로 대안으로 IB(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나 IGCSE(International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를 롤모델로 소개하고 있다. 교육관련 이익집단들의 반발로 인해 내부적으로 개혁의 동력을 찾기 힘들다면 국제적으로 공인된 제도를 통째로 도입해 보자는 것이다.

IB나 IGCSE는 시험만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들 교육과정 안에 수능, 내신, 논술, 비교과 4가지 요소가 모두 녹아 있고, 지식전달과 암기력을 테스트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힘을 키운다는 교육 목표에 따라 잘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되찾기 위해서는 교육개혁을 통해 경제·사회를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문부성에서 2015년부터 IB를 국가 단위에서 통째로 도입하기로 했다. 2018년에는 300개 학교에 IB를 도입시키자는 목표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IB가 대학입시 관련 고등학교 과정부터 도입될 때 초중등과정과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느냐는 숙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또한 IB의 채점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시험의 난이도에 대한 수용가능성, 기존 학교현장에서의 적용가능성, 직업교육을 받아야 할 또 다른 경로와의 상호관계 등 수많은 난제에 대한 설득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IB의 국제공통적인 프로그램으로서의 개방성으로 인해 사실은 Localization이 중요한 중등과정보다는 인간 자체에 대한 성장과 개발을 확보해야 하는 유아 및 초등과정에서의 IB도입이 더합리적인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7. 맺는 말

첫째, 대학은 수능, 논술, 내신, 비교과로 입학한 학생들의 성취도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국민들에게 대학의 선발권한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둘째, 대입시험은 대학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교과 이기주의나 교원단체 또는 교육 관료들의 기득권에 의해 영향 받는 국가개입주의적인 대학 입시제도는 이제 수명이 다했다고 본다. 또한 이미 교육본연의 목표 달성에 실패한 수능은 폐지하거나 자격시험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내신 역시 다른 입시전형의 보조적인 역할에 그쳐야 한다.

셋째, 대학입학시험에서 어떤 형태로든 주관식 지필시험이 부활되어야 하며 암기력 테스트가 아닌 문제해결능력과 창의적 사고능력, 생각하는 힘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학종을 포함한 모든 대입시 전형은 대학의 전적인 권한에 맡기되 IB나 IGCSE 등 국제적인 시험제도를 대학입학시험에 도입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

넷째, 시험제도로써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으로서 고등학교 과정에 IB Diploma Program, 유아 및 초등 과정에 IB Primary Program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과정별 시범학교를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

* 참고자료 : 서울시립대 입시전형별 학업성취도 분석

그룹핑하기 [P-Value 분석]

1. 입학전형별 성취도 차이에 대한 분석

```
> pairwise.t.test(x = tab$GPA, g = tab$admission.type) # 외국인, 계약 제외
```

Pairwise comparisons using t tests with pooled SD

data: tab\$GPA and tab\$admission.type

입학유형	정시일반	정시특별	수시논술	수시교과	수시학생부종합	수시특기자	외국인
정시특별	1.00000	-	-	-	-	-	-
수시논술	3.0e-06	0.00023	-	-	-	-	-
수시교과	8.0e-12	3.0e-06	1.00000	-	-	-	-
수시학생부종합	0.59357	1.00000	0.00895	0.00228	-	-	-
수시특기자	0.99377	1.00000	0.00253	0.00023	1.00000	-	-
외국인	< 2e-16	4.6e-09	< 2e-16	< 2e-16	0.04413	5.8e-05	-
계약학과	0.11321	0.99377	0.00017	1.5e-05	1.00000	1.00000	0.01138

P-V

alue<0.05 의 경우 통계적으로 입학전형별 그룹간 학업성취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본다.

정시특별과 정시일반 ---> 차이 없어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다.

수시교과와 수시논술 ---> 차이 없어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다.

수시특기자와 수시학생부종합 ---> 차이 없어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다.

2. 계열별 성취도 차이에 대한 분석

```
P value adjustment method: holm
> pairwise.t.test(x = tab$GPA, g = tab$major.type) # 예체, 계약 제외
```

Pairwise comparisons using t tests with pooled SD

data: tab\$GPA and tab\$major.type

계열	자연	인문	예체
인문	0.43333	-	-
예체	< 2e-16	< 2e-16	-
계약	0.00123	0.00075	0.35206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성취도 차이가 유의미하다.

예체능 및 계약은 통계적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고 분석 데이터가 부족하다.

3. 출신학교별 성취도 차이에 대한 분석

```
P value adjustment method: holm
> pairwise.t.test(x = tab$GPA, g = tab$educational.background.type) # 특성화고, 기타 제외-비주류
```

Pairwise comparisons using t tests with pooled SD

data: tab\$GPA and tab\$educational.background.type

	기타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일반고	< 2e-16	-	-	-
자사고	1.5e-12	0.866	-	-
특목고	2.2e-09	0.731	0.866	-
특성화고	0.065	0.013	0.031	0.104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특성화고와 일반고 및 자사고 사이에 성취도 차이가 유의미하나 특별한 분석을 요하지는 않는다.

결론 :

입학전형별 분석에서 1)정시, 2)수시(논술/교과), 3)수시(비교과) 이상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보아야 하고

계열별 분석에서 1)인문, 2)자연 이상 2개 그룹으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출신학교별 분석에서 특성화고와 기타를 제외하기로 하고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는 차이가 없어 나누어 볼 필요가 없다.

본통계[선형회귀분석]

```
> mod.tab <- lm(formula = GPA ~ admission.category * educational.background.type + educational.background.type:duration + sex * (major.type + duration) + admission.year, data = tab.2)
> car::Anova(mod.tab)
Anova Table (Type II tests)

Response: GPA
```

	Sum Sq	Df	F value	Pr(>F)	
admission.category	3.140	2	15.5548	2.011e-07 ***	#(비교과 < 정시 < 수시)
educational.background.type	0.003	2	0.0161	0.9839976	
sex	0.200	1	1.9776	0.1598209	
major.type	0.767	1	7.5965	0.0059084 **	
duration	1.992	4	4.9342	0.0005885 ***	
admission.year	0.573	4	1.4190	0.2251879	#입학년도는 예상대로 학점과는 무관
admission.category:educational.background.type	0.990	4	2.4512	0.0442416 *	
educational.background.type:duration	0.313	8	0.3875	0.9277621	
sex:major.type	0.405	1	4.0143	0.0452695 *	
duration:sex	5.889	4	14.5876	1.001e-11 ***	
Residuals	178.230	1766			

```
Signif. codes:  0 '***' 0.001 '**' 0.01 '*' 0.05 '.' 0.1 ' ' 1

# admission.category 입학유형, educational.background.type 출신고교계열, sex 성별, duration 졸업에 걸린 기간, admission.year 입학년도, major.type 전공계열
```

- 1) 입학전형별 성취도 차이가 유의미하다. 그 결과는 비교과 < 정시 < 수시 순으로 나타난다.
- 2) 전공계열별 성취도 차이가 유의미하다. 단 성별 성취도 차이와 상관관계가 있어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 3) 졸업에 걸린기간에 따른 성취도 차이가 유의하다. 단 성별 성취도 및 출신학교별 성취도와 상관관계가 있어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상관관계분석

1. 입학전형별 성취도와 출신학교별 성취도의 상관관계

```
> lsmeans(mod.tab, pairwise~admission.category*educational.background.type, adjust="tukey")
$lsmeans
admission.category educational.background.type  lsmean      SE    df lower.CL upper.CL
정시              일반고                3.706383 0.06844989 1766 3.572131 3.840634
수시              일반고                3.761362 0.06918413 1766 3.625671 3.897053
비교과            일반고                3.512290 0.07595812 1766 3.363312 3.661267
정시              자사고                3.682123 0.08547499 1766 3.514480 3.849766
수시              자사고                3.815254 0.08681769 1766 3.644977 3.985530
비교과            자사고                3.797100 0.24019974 1766 3.325994 4.268205
정시              특목고                3.776793 0.09910776 1766 3.582412 3.971173
수시              특목고                3.740170 0.10739932 1766 3.529527 3.950813
비교과            특목고                3.910027 0.20757598 1766 3.502906 4.317147
```

Results are averaged over the levels of: duration, sex, major.type, admission.year
Confidence level used: 0.95

1) 자사고의 경우 정시 < 비교과 < 수시

2) 특목고의 경우 수시 < 정시 < 비교과

3) 일반고의 경우 비교과 < 수시 < 정시

결론 : 본통계상 비교과 < 정시 < 수시 라는 결과는 주로 일반고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2. 입학전형별 성취도와 출신학교별 성취도의 상관관계 상세분석

\$contrasts						
contrast	estimate	SE	df	t.ratio	p.value	
정시, 일반고 - 수시, 일반고	-0.05497949	0.01778080	1766	-3.092	0.0520	
정시, 일반고 - 비교과, 일반고	0.19409277	0.04786095	1766	4.055	0.0017	** #1
정시, 일반고 - 정시, 자사고	0.02425955	0.05893801	1766	0.412	1.0000	
정시, 일반고 - 수시, 자사고	-0.10887113	0.06059098	1766	-1.797	0.6844	
정시, 일반고 - 비교과, 자사고	-0.09071723	0.23296848	1766	-0.389	1.0000	
정시, 일반고 - 정시, 특목고	-0.07041004	0.07757947	1766	-0.908	0.9926	
정시, 일반고 - 수시, 특목고	-0.03378715	0.08779258	1766	-0.385	1.0000	
정시, 일반고 - 비교과, 특목고	-0.20364441	0.19832989	1766	-1.027	0.9833	
수시, 일반고 - 비교과, 일반고	0.24907226	0.04809078	1766	5.179	<.0001	*** #2
수시, 일반고 - 정시, 자사고	0.07923904	0.06011440	1766	1.318	0.9261	
수시, 일반고 - 수시, 자사고	-0.05389163	0.06152661	1766	-0.876	0.9942	
수시, 일반고 - 비교과, 자사고	-0.03573774	0.23321300	1766	-0.153	1.0000	
수시, 일반고 - 정시, 특목고	-0.01543055	0.07813038	1766	-0.197	1.0000	
수시, 일반고 - 수시, 특목고	0.02119234	0.08817458	1766	0.240	1.0000	
수시, 일반고 - 비교과, 특목고	-0.14866491	0.19864718	1766	-0.748	0.9981	
비교과, 일반고 - 정시, 자사고	-0.16983322	0.07361184	1766	-2.307	0.3382	
비교과, 일반고 - 수시, 자사고	-0.30296390	0.07478883	1766	-4.051	0.0017	** #3
비교과, 일반고 - 비교과, 자사고	-0.28481000	0.23689654	1766	-1.202	0.9562	
비교과, 일반고 - 정시, 특목고	-0.26450281	0.08867869	1766	-2.983	0.0712	
비교과, 일반고 - 수시, 특목고	-0.22787993	0.09778823	1766	-2.330	0.3243	
비교과, 일반고 - 비교과, 특목고	-0.39773718	0.20291595	1766	-1.960	0.5717	
정시, 자사고 - 수시, 자사고	-0.13313068	0.04514708	1766	-2.949	0.0782	
정시, 자사고 - 비교과, 자사고	-0.11497678	0.22864491	1766	-0.503	0.9999	
정시, 자사고 - 정시, 특목고	-0.09466959	0.09033810	1766	-1.048	0.9810	
정시, 자사고 - 수시, 특목고	-0.05804671	0.09946614	1766	-0.584	0.9997	
정시, 자사고 - 비교과, 특목고	-0.22790396	0.20336625	1766	-1.121	0.9712	
수시, 자사고 - 비교과, 자사고	0.01815390	0.22964917	1766	0.079	1.0000	
수시, 자사고 - 정시, 특목고	0.03846109	0.09124153	1766	0.422	1.0000	
수시, 자사고 - 수시, 특목고	0.07508397	0.10012257	1766	0.750	0.9980	
수시, 자사고 - 비교과, 특목고	-0.09477328	0.20389000	1766	-0.465	0.9999	
비교과, 자사고 - 정시, 특목고	0.02030719	0.24277147	1766	0.084	1.0000	
비교과, 자사고 - 수시, 특목고	0.05693008	0.24624034	1766	0.231	1.0000	
비교과, 자사고 - 비교과, 특목고	-0.11292718	0.30397459	1766	-0.372	1.0000	
정시, 특목고 - 수시, 특목고	0.03662289	0.06328427	1766	0.579	0.9997	
정시, 특목고 - 비교과, 특목고	-0.13323437	0.18816993	1766	-0.708	0.9987	
수시, 특목고 - 비교과, 특목고	-0.16985725	0.19136798	1766	-0.888	0.9936	

Results are averaged over the levels of: duration, sex, major.type, admission.year
P value adjustment: tukey method for comparing a family of 9 estimates

#1,2를 통해, 일반고 졸업: 비교과 < 정시,수시. (정시 < 수시 이나 유의한 차이는 아님.)
#3을 통해, 비교과 일반고 < 수시 자사고

가장 유의미한 통계적인 결과는
'일반고 비교과 < 일반고 정시/수시' 이다.
따라서 일반고 정시/수시와 자사고/특목고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3. 전공계열과 성별 성취도 상관관계 분석

```
> lsmeans(mod.tab, pairwise~sex*major.type, adjust="tukey")
$lsmeans
sex major.type lsmean SE df lower.CL upper.CL
남 자연 3.711290 0.08224547 1766 3.549981 3.872599
여 자연 3.739649 0.08023399 1766 3.582286 3.897013
남 인문 3.716028 0.08380755 1766 3.551655 3.880400
여 인문 3.811477 0.07938629 1766 3.655776 3.967178
```

Results are averaged over the levels of: admission.category, educational.background.type, duration, admission.year
Confidence level used: 0.95

인문계 여자의 성취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전공계열별 성별 성취도 상관관계 상세분석

```
$contrasts
contrast estimate SE df t.ratio p.value
남, 자연 - 여, 자연 -0.028359402 0.04014192 1766 -0.706 0.8946
남, 자연 - 남, 인문 -0.004737839 0.02624876 1766 -0.180 0.9979
남, 자연 - 여, 인문 -0.100186924 0.04031226 1766 -2.485 0.0626
여, 자연 - 남, 인문 0.023621563 0.04409099 1766 0.536 0.9503
여, 자연 - 여, 인문 -0.071827522 0.02109760 1766 -3.405 0.0038 **
남, 인문 - 여, 인문 -0.095449085 0.04410071 1766 -2.164 0.1337
```

#여자자연 < 여자인문,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여자인문이 남자인문, 남자자연, 여자자연 보다 학점이 높은 경향. 여자인문은

Results are averaged over the levels of: admission.category, educational.background.type, duration, admission.year
P value adjustment: tukey method for comparing a family of 4 estimates

인문계 여자의 성취도가 자연계 여자나 남자의 성취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

5. 졸업에 걸린 기간과 성별에 따른 성취도 상관관계 분석

```
> lsmeans(mod.tab, pairwise~sex*duration, adjust="tukey")
$lsmeans
sex duration    lsmean      SE    df lower.CL upper.CL
남         3      3.986470 0.15631254 1766 3.679893 4.293047
남         3      4.106557 0.19420388 1766 3.725664 4.487451
남         4      3.563162 0.08134378 1766 3.403621 3.722702
남         4      3.797688 0.08007405 1766 3.640638 3.954738
남         5      3.662838 0.08865715 1766 3.488954 3.836722
남         5      3.688689 0.07940224 1766 3.532956 3.844421
남         6      3.736281 0.08085160 1766 3.577706 3.894856
남         6      3.649676 0.08027466 1766 3.492233 3.807119
남         7      3.619544 0.09044984 1766 3.442144 3.796944
여         7      3.635206 0.09640199 1766 3.446132 3.824280
```

Results are averaged over the levels of: addmission.category, educational.background.type, major.type, addmission.year
Confidence level used: 0.95

유의미한 결과를 찾기 어렵다.

6. 졸업에 걸린 기간과 성별에 따른 성취도 상관관계 상세분석

```

$contrasts
  contrast      estimate      SE    df t.ratio p.value
3 - 4,3 -0.12008762 0.17065594 1766 -0.704 0.9995
3 - 4,4 0.42330826 0.14031651 1766 3.017 0.0774
3 - 4,5 0.18878155 0.14008646 1766 1.348 0.9423
3 - 4,6 0.32363160 0.14354863 1766 2.255 0.4197
3 - 4,7 0.29778132 0.13865480 1766 2.148 0.4938
3 - 5,3 0.25018898 0.13920101 1766 1.797 0.7371
3 - 5,4 0.33679392 0.13935765 1766 2.417 0.3162
3 - 5,5 0.36692560 0.14538908 1766 2.524 0.2563
3 - 5,6 0.35126404 0.14937645 1766 2.352 0.3562
3 - 5,7 0.54339588 0.19721341 1766 2.755 0.1529
3 - 6,3 0.30886917 0.19678131 1766 1.570 0.8627
3 - 6,4 0.44371921 0.20000451 1766 2.219 0.4442
3 - 6,5 0.41786894 0.19622623 1766 2.130 0.5066
3 - 6,6 0.37027659 0.19707459 1766 1.879 0.6835
3 - 6,7 0.45688154 0.19685379 1766 2.321 0.3757
3 - 7,3 0.48701321 0.20089167 1766 2.424 0.3118
3 - 7,4 0.47135165 0.20377045 1766 2.313 0.3808
3 - 7,5 -0.23452671 0.03383170 1766 -6.932 <.0001 *** # (4년졸업: 남자 < 여자)
3 - 7,6 -0.09967667 0.05659052 1766 -1.761 0.7595
3 - 7,7 -0.12552694 0.04140029 1766 -3.032 0.0742
3 - 8,3 -0.17311929 0.04499538 1766 -3.847 0.0048 ** # (남자4년졸 < 남자6년졸:군대)
3 - 8,4 -0.08651434 0.04407947 1766 -1.963 0.6256
3 - 8,5 -0.05638267 0.05995047 1766 -0.940 0.9951
3 - 8,6 -0.07204423 0.06843677 1766 -1.053 0.9888
3 - 8,7 -0.13485005 0.05537806 1766 -2.435 0.3055
3 - 9,3 -0.10899977 0.03843017 1766 -2.836 0.1252
3 - 9,4 -0.06140743 0.04307647 1766 -1.426 0.9194
3 - 9,5 -0.14801237 0.04123499 1766 -3.589 0.0126 * # (여자6년졸 < 여자4년졸)
3 - 9,6 -0.17814405 0.05776646 1766 -3.084 0.0640
3 - 9,7 -0.16248249 0.06651434 1766 -2.443 0.3010
3 - 10,3 -0.02585027 0.04693574 1766 -0.551 0.9999
3 - 10,4 -0.07344262 0.05373833 1766 -1.367 0.9372
3 - 10,5 -0.01316232 0.05330224 1766 0.247 1.0000
3 - 10,6 0.04329400 0.06696343 1766 0.647 0.9997
3 - 10,7 0.02763244 0.07475540 1766 0.370 1.0000
3 - 11,3 -0.04759235 0.03754470 1766 -1.268 0.9606
3 - 11,4 0.03901260 0.03516988 1766 1.109 0.9839
3 - 11,5 0.06914427 0.05411110 1766 1.278 0.9586
3 - 11,6 0.05348271 0.06310027 1766 0.848 0.9978
3 - 11,7 0.08660495 0.02657862 1766 3.258 0.0379 * # (여자6년졸 < 남자6년졸) p.s. 남자6년졸 < 여자4년졸 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님. 두 군은 정상적인 기간에 졸업.
6 - 6,3 0.11673662 0.05564524 1766 2.098 0.5292
6 - 6,4 0.10107506 0.06500036 1766 1.555 0.8693
6 - 6,5 0.03013168 0.05475843 1766 0.550 0.9999
6 - 6,6 0.01447011 0.06371836 1766 0.227 1.0000
6 - 7,3 -0.01566156 0.05902465 1766 -0.265 1.0000

```

Results are averaged over the levels of: admission.category, educational.background.type, major.type, admission.year
P value adjustment: tukey method for comparing a family of 10 estimates

여 자 의

경우 '6년 졸업 < 4년 졸업', 남자의 경우 '4년 졸업 < 6년 졸업' 이라는 결과를 보인다.

여자의 경우 학력부진으로 졸업년도를 늦추는 경향, 남자의 경우 군복무자와 군면제/연기 위한 대학원 진학자의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판단은 추가분석을 요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본통계 분석의 최종결론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미한 결과는

- 1) '일반고 비교과 < 일반고 정시/수시' 로 특히 일반고 비교과의 경우 학업성취도가 낮은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
- 2) 일반고 정시/수시의 경우 특목고나 자사고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

통계분석 결론에 대한 해석

1.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에 대한 비교과 입학전형(학생부종합전형/특기자전형)은 입학사정관에 의한 서류심사 제도이다. 입학사정관들이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되는 입시제도로서 아직까지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데 미흡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입학사정관 제도의 더욱 정교한 선발기법의 개발과 입학사정관들의 평가능력 신장 등 지속적인 개선을 요한다. 그리하여 비교과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타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과 같은 수준의 성취도를 보이도록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
2.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학부모와 학생의 노력 여하에 따라 더욱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입시전형이 비교과입시전형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반면에 학부모의 관심과 학생에 대한 교사의 관심에 의해 학생의 비교과 입시전형 혜택을 누리느냐가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학부모나 교사의 관심 밖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의 경우 비교과 입시전형의 혜택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어 학생들 입장에서 주어지는 기회가 평등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내재해 있다.
3. 서울시립대학교의 전수조사에 의한 결과이지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분석이 주요 대학들에서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들이 공동연구하여 학종의 학업성취도가 더 높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통계적인 유의성을 대해 명확한 자료를 공개했는지 분명하지 않다. 연구주체를 시민단체나 제3의 기관에 맡기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입학사정관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서울대의 경우 비교과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성취도에 대한 조사분석과 그 결과가 공개된 바 없어 제도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교육부는 비교과전형에 의한 입학생 비율을 정책적으로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비교과입시전형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대와 교육부는 입학사정관제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하여 이 제도를 개선 보완할 점은 없는지 이 제도를 축소 또는 확대해야 할는지 평가하고 검토하여 국민들 앞에 공개해야 한다.

토 론 문

김 행 범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현재 시도되는 개편안의 기본 개요는 이렇다. 국립대를 통합하고, 사립대를 통합하고 이 둘을 공유(공유네트웍)이란 이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개악하는 것, 그리고 국립대를 통합하여 통합국립대로, 사립대학들을 공영화된 통합사립대로 묶는다. 통합국립대는 ‘서울대+잔여 국립대’ 혹은 ‘서울대까지 포용한 모든 국립대’로, 통합사립대는 ‘연고대성대 등의 독립형 사립대+잔여 사립대 조합’으로 묶어 나간다는 것이다.

통합국립대 선발은 계열별로, 내신 10% 이내, 수능을 자격시험화, 내신 성적으로 한다. 내신성적으로 70%, 수능으로 30% 선발 후 지역 선택은 추첨으로 한다. 서울대까지 통합할 경우엔 서울대 학부 정원의 50%를 타지역의 통국대 학생에게 개방한다. 기초학문은 통합국립대학이, 응용학문은 공영화된 사립에게 분담한다. 통합이사회로 통합국립대 전체를 관장하며, 통합된 공영사립대학은 실질적으로 공영 및 국영으로 운영한다. 공동선발, 공동학위, 교직원의 순환근무제를 실시한다. 통합국립대는 전국적 통합체제로 운영하며, 통합된 공영사립대학은 권역별(지역별) 통합체제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교육 개편이 이 정도로 큰 규모로, 이토록 무모하고도, 이만큼 정치적 동기로 물든 채 시도된 적이 없었다. 이 안의 개별 문제점들은 김상국 대표께서 잘 지적해 주고 있다.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이 안이 전제하고 있는 정책설계의 인과관계에 대한 근본 의문이다. 서울시 교육청이 2017.3.15. 연구 발표에 토대. “통합국립대, 공영형사립대로 이뤄지는 대학공유네트워크 제안 - 서울시 교육청,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3단계 현실적 대학개혁안 제시”이다. 즉 이 생경한 안은 전적으로 초중등교육을 주관하는 서울시 교육감이 나름 그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한다는 목표로 수립한 방안을 모색하다가 그것이 대학교육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인지하고서 대학교육체제의 개편까지 나아간 것이다(* “... 이에 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감으로서 대안 모색의 의무를 다하고자 대학체제 개혁을 제안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2017.3.15. 1면.)

유치원교육정상화를 위해 초중등교육체제를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이 타당성이 부족하듯이 초중등교육정상화를 위해 이런 식의 대학교육체제 그것도 전 세계 유례가 드문 좌파지향적 교육체제로, 건국 이래 최대의 개악을 도모하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대학교육체제는 초중등교육체제를 위해 존재함이 아니다. 인간의 전반적 교육의 발전단계를 비추어 본다면,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양성하는 교육을 위해 그 직전 단계인 대학교육을 효과적인 수단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대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대학교육을 위해서는 어떻게 초중등교육체제를 효과적인 수단적 정책대안으로 개편할 것인가 검토되는 것이 올바른 인과관계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와는 정반대로 출발하였다. 그러다 보니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서울시교육감이 전국의 국공립총장 및 사립대 총장, 나아가 교육부장관, 심지어 대통령의 일까지 자임하는 괴이한 꼴이 되어 버렸다. 조희연 교육감의 의욕의 과다 분출이며 교육감은 본연의 초중등교육업무로 관심을 겸비하게 회귀함이 도리이다.

둘째,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정책이 궁극 지향 가치가 잘못 설정되어 있다. 교육은 교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궁극 가치(인성, 지식, 기능 등)의 달성에 기여하는 수단이지 교육 그 자체가 ‘차별이 없어야 한다.’든지, ‘경쟁이 과도하지 않은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이 궁극 가치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정책이 지향하는 것은 교육 그 자체의 경쟁완화, 위화감완화, 평준화에만 몰입해 있어 이 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할 종국적 가치(인성, 지식, 기능 등)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여기에서 제시된 교육체제개편은 오히려 그러한 교육의 종국적 가치의 실현을 크게 가로 막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운동선수를 훈련시키는 필요한 기능, 체력, 지식을 익혀 경기를 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가치이지 그 훈련과정에서 차별 없이, 위화감 안 느끼도록, 너도나도 부담 안 느끼게 훈련시키자는 것이 종국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정책제안은 교육 개편 목적의 우선순위를 몰각하고 있다.

셋째, 더 근본적 문제는 이것이다. 이 정책은 교육을 개선하자는 안이 아니라 사회혁명으로 규정한 정치이벤트의 후속조치로 이를 추진하려고 한다. 이 안은 프랑스 파리대학 체제를 곳곳에서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희소한 예이다. 더 많은 나라에서 비(非) 공영적 체제로 우수한 교육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왜 하필이면, 그 체제인가?

이 점에서 이 안 스스로 정치적 냄새 가득한 개편안의 본질을 부지 중 노출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대학의 통합국립대 체제가 68년 혁명 이후에 설치되었는데한국의 ‘촛불 시민혁명’이 불평등한 사회현실과 교육현실에 대한 반대와 저항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규정하고 이 때문에 이를 시도한다고 명시한다(*서울시교육청. 통합국립대-공영형 사립대학에 기초한 대학 공유네트워크 구축(안). 2017. 3.17. 4면). 교육 개혁을 이런 식의

정치화로 접근함은 대단히 위험하고 교육의 본질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며, 이런 동기의 개편이 수용되기도 어려울 것이다. 교육마저 어떤 정치 이념의 종속물로 간주하려는 것은 어떤 정파 및 집단도 자제해야 한다.

넷째, 이 개악 안은 교육 발전에 대한 보편적 이해와 수용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증오’를 자원삼아 출발한 것이다. 대학학력을 수월성의 대가가 아니라 기득권의 산물로 보며, 사립교육 및 그 기관은 악이며 국립 및 공유 교육이 선이며, 개인 노력의 결과적 보상의 차이는 악으로 보는 오도된 가치관에 토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얻지 못한 집단의 시기심을 자극하고 그러한 결과적 차이를 하향평준화를 통해 소멸시킴으로써 얻는 통쾌한 가학(sadism)을 자원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국가가 이런 그릇된 동기를 정책추진 동력으로 사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정당성이 없다.

[illegible]

[illegible]



서울시 중구 통일로 86, 612호(순화동, 바비엥3차)

Tel : 02-741-7660~2

Fax : 02-741-7663

<http://www.cubs.or.kr>